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6
----------	-----

제안년월일: 2018년 12월 19일
제안자: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한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외부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공부문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의 원칙적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이를 민간영역에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며,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고를 비롯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합동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지난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입사한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청년 노동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없이 야간에 혼자 작업을 하였고,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지침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기계를 멈춰줄 동료도 없고 흔한 CCTV도 하나 없이 컨베이어 벨트 점검에 들어간 청년 노동자는 연락이 끊긴 4시간 동안 안전 관리를 책임진 원청업체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의 규명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감독, 조사위원회 구성, 긴급 안전조치, 인력충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이 와중에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리한 경영 효율화의 추진으로 인한 안전업무의 획일적 외부화는 현장 기술 인력의 부족, 근무여건의 악화, 작업과정의 혼선, 안전 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문제는 2016년 5월 하청업체 소속의 19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 법령 위반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경영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 그러는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을 비롯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민간영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원청업체와 발주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